

## 교통·재해·인구·환경평가 일원화

내년부터 댐과 항만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실시하는 교통·재해·인구·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로 통합 일원화 된다.

또 산업단지와 택지·항만·도로·철도 등 27개 대규모 건설사업도 타당성 조사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만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입법예고 등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다목적 댐과 개펄매립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인구·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온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대형 개발사업의 관련법령과 개별 평가용역이 환경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과 연관돼 있어 쉽사리 조정될 지 주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대부분 녹지보전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잘 안되면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63개 대형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택지, 항만, 도로, 철도 등 27개 사업도 해저유전 등 에너지개발과 다목적 댐 등 기존의 36개 대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시계획 이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평가서의 반려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해당업체와의 협의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서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 변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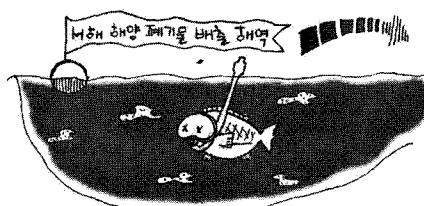
오물투기에 따른 서해 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 위치가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7일 군산 서쪽 2백 km지점에 위치한 해양오물 투기장소인 서해 병(면적 3천 80km<sup>2</sup>) 해역의 해류 이동이 원만하지 못해 오염물질이 고인다는 지적에 따라 오물 투기 장소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새 오물투기 해역으로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장소는 현재의 서해 병 해역기준 남쪽 1백 50km 해역과 북동쪽 90km 해역 두 곳으로 빠르면 올해 말 변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서해 병’ 해역의 부영양화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비, 쓰레기 투기량을 총량 규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하대 崔仲基교수(해양학과)팀이 지난 96년 7월부터 ‘서해 병’ 일대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구리가 0.5ppb, 카드뮴이



0.1ppb씩 검출되고 플랑크톤의 양과 어종이 급격히 주는 등 이 일대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서해병' 해역과 포항 동쪽 1백 25km 지점인 '동해 병'(면적 3천6백 88km<sup>2</sup>), 부산 동쪽 90km지점인 '동해 정'(면적 1천1백80km<sup>2</sup>) 등 세 곳을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 분뇨 등 오물을 버리도록 허용해왔다.

### 공장 독성물질 배출량 보고 의무화

앞으로 정유·화학공장은 암과 불임 등을 유발하는 벤젠과 폐놀·톨루엔 등 독성물질의 배출량을 스스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 제도(TRI, toxics release inventory)'를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8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석유정제, 화학업종 가운데 연간 50t 이상 유독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고 상시 근로자가 1백명 이상인 1백20여 사업장은 대기나 폐수, 폐기물을 통해 환경으로 누출되는 양을 환경부에 자율 보고해야 한다.

TRI 시범 실시대상에는 SK(주),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LG화학, LG-칼텍스, 현대정유, 쌍용정유 등 7개 업체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발암성, 생식 독성, 유전독성을 지녀 국제적인 유해화학물질로 인정된 벤젠, 톨루엔, 황산, 메탄올, 폐놀, 질산, 에탄올 등 80종 가운데 국내에서 연간 1천t 이상 유통되는 독성물질을 1차 TRI 대상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1년간 TRI 1차 사업을 실시한 뒤 대상 화학물질을 2백4종으로 늘리고 대상업체

도 연간 10t이상 취급하는 회사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TRI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스스로 독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TRI를 통해 유해물질 환경배출량을 종전보다 30~40%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굴지의 화공회사들은 유해물질 배출량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한반도 주변 저염분 해수화 우려

한반도 주변의 계릴라성 집중호우와 중국 양쯔(揚子)강 주변의 홍수로 바닷물 염도가 낮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름철 폭우로 빗물의 바다유입이 늘어나면서 바닷물의 소금기가 열어지는 저염분 해수화 발생이 우려돼 '비상'이 걸렸다.

바다의 염분상태가 2.5%를 밀들게 되면 전복 등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의 절반이상을 폐사시키는데 올 여름 한반도 주변에 폭우가 집중되며 이같은 저염분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쯔강 홍수가 심해질 겨우 황톳물이 우리 서해상까지 직접 밀려 올 수도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국립수산진흥원 등을 통해 4척의 조사선을 서해 연안에 집중 배치, 매일 염분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양쯔강 홍수의 영향으로 제주도 서쪽 1백마일 수역의 염분 농도가 2.9%로 평상시 3.0~3.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달 들어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계속 발

령돼 최근들어 해상 조사활동이 중단된 점을 감안한다면 저염분 상태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조사선을 저염분 발생우려 수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국립수산진흥원 관계자는 “빗물의 유입으로 바닷물 염도가 금방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 수역에 대한 염분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암성 유기용제 완전 무공해 처리

발암성 물질로 공단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켜온 테트라에틸렌(PCE)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을 완전 무공해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曹寅哲연구사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논문 ‘광촉매를 이용한 PCE 등의 분해에 관한 연구’에서 ‘PCE와 TCE 등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질이 녹아있는 공장 폐수나 지하수에 자외선을 쪼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무공해 물질로 완전분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 폐수처리장의 벽면에 섭씨 2백도 이상에서 코팅처리한 이산화티타늄을 흡착시킬 경우 유기 오염물질을 상당히 감소시켜 인근 지하수나 하천의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曹연구사가 밝혔다.

코팅화된 이산화티타늄에 의한 처리방법은 한 번 설치하면 거의 교체할 필요없이 반영구적이라는 강점도 있다.

지금까지는 분말상태인 이산화티타늄을 공장 폐수 등에 자주 투입해야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이 분말찌꺼기로 인한 2차 오염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보호야생종 ‘금개구리’ 서식지 확인

환경부가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한 금개구리가 전북 신태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환경부는 최근 호남대 高塔根교수팀이 실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전북 신태인읍·부안군·김제시·군산시와 전남 영광군, 충남 대천시에서 30여마리의 금개구리 서식을 확인했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금개구리는 백령도와 비무장지대 등 인적이 드문 일부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금개구리는 몸길이가 6cm 정도로 이번 조사에서 참개구리·청개구리와도 함께 서식하는 것으로 판찰됐으며 등 옆에 2개의 융기선이 있고 등 가운데에 크고 작은 돌기가 조밀하게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개구리는 일부 지역에서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수면에 개구리밥과 물풀이 존재하는 소형수로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개구리 서식지에서 미꾸리가 주로 발견돼 미꾸리를 잡아먹는 것으로 추정되며 7월 중순에 올챙이가 변태중인 것으로 확인돼 5월에 산란한 뒤 7월이전에 변태를 마치는 참개구리와는 변식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개구리 서식지에는 황소개구리가 없고 황소개구리 서식지에는 금개구리나 참개구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외래종인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재차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 ▲황소개구리

퇴치 ▲서식·번식 장소인 수로의 콘크리트화 방지 ▲농약의 과다사용 억제 등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지역을 생태계변화 관찰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서식지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개구리 등 보호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식약청 환경호르몬 연구협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협의회'를 발족,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8월 3일 전문가들로 환경호르몬 모니터링, 독성평가, 위해도평가, 국제협력연구 등 4개 실무연구반을 구성해 분야별 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모니터링 사업으로 2003년까지 음료수나 통조림 캔, 유아용식기, 젖병,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 도시락 용기, 식육포장 용기, 가소제를 사용한 PVC제품(식품포장용 랩 등)에 대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청이 주목하고 있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은 '비스페놀 A'와 '스티렌 다이머 및 스티렌 트리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디사이크로헥실 프탈레이트(DCHP)', '디-에틸헥실 아디페이트(DEHA)', '디-엔-프로필 프탈레이트(DBP)',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디에틸 프탈레이트(DEP)'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오염가능성이 높은 식품류를 선정, 수은·납·카드뮴·트리부틸 주석 등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와 함께 인체의 혈액·지방조직·정액·노 등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잔류농

약·유해중금속 등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미국 화학산업독성연구소(CIIT),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 등과 국제 협력을 정례화해 오는 2003년까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의 독성평가 및 위해도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 경기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 마련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도가 마련한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골자를 보면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권 수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도권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상수원보호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그밖의 설치 및 운영비는 수도권 상수원의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수 사용량과 오염 발생량 등을 감안해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상수원 수질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의 수도권 수질 관리청을 설치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및 평가를 위해 주민 대표와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질관리평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도는 도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